

사상 첫 7000억달러 수출 돌파 제조업·신산업 동반성장 결실

산업부·관세청, 잠정 집계 발표

美 관세·보호무역 속 이론 성과
수출 호조에 외국인 투자 확대
반도체·자동차 등 회복세 뚜렷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번째 '7000억달러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속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2025년 12월 29일 13시 3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1948년 첫 수출 실적 집계 이후 77년 만에 세운 역사적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수출 6000억달러는 달성은 세계 7번째였으나, 이번 7000억달러는 6번째로 도달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에너지 수입은 1174억 달러였고, 무역수지는 7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은 상반기 부진으로 출발했으나 하반기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9월 수출액은 659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1~11월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660억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고, 선박 수출은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에 힘입어 8년 만에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바이오시밀러 품목 확대와 위탁생산(CMO) 수주 증가로 호조를 이어갔다.

K-푸드와 K-뷰티, 전기기기 등 소비재·유망 품목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농수산물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등은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확실시되며,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수출 시장 역시 미·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가 진전됐다. 1~11월 기

준 중국과 미국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비중은 확대됐다. 중소기업 수출도 9월까지 수출액과 수출 기업 수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수출 호조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연간 외국인직접투자가 35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과 사업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지방 중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며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취약가구에 등유·LPG '맞춤형 복지' 확대

기후부, 에너지바우처 최대 51만4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현행 대비 14만7000원 높아진다.

기후부는 등유·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평균 36만7000원 지원하던 금액을 51만4000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방식은 추가 지원금액 14만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년 1월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추가 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과 동일하게 내년 5월25일까지다.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이 추가 지원금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에너지공단이 개

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하고,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을 안내할 계획이다. 등유·LPG 가구에는 내년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공급사의 요금 할인 혜택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돼 있다"며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고향사랑기부' 임직원 참여 독려

농촌·농업인 지원 기부 확산

농협중앙회가 범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시 적립된 기부금이 지자체의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또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난주 농협의 지역사회공헌부 직원들은 출근길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과 커피 등을 증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역별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비롯해 농협 앱(올원뱅크, 쿠팡뱅크), 영업점 사이니지,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농협 농업농촌지원본부의 이광수 상무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라며 "세액공제 혜택과 농축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온투업자 약관 281개 조항 시정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공정위, 온투업자 34곳 전수 점검
위험 전가·과도한 면책 조항 다수 확인
투자자 책임 떠넘긴 불공정 약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들의 약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29일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유형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권 전반의 표준·개별 약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에 이어 이번

에는 온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 약관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온투업자가 부담해야 할 연계투자 한도 관리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조항을 꼽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한도 준수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약관에서는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 약관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만·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계약해지 사유를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법령상 연대보증은 공동대표자나 대표이사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일부 약관은 그 외의 제3자까지 포괄적으로 보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이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 학급 수 줄어도 행정인력 2년 유지

서울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학급 수 급감 따른 행정 공백 완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급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 인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와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 급감으로 인한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축을 완충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도입한 점이다. 정원 산정 구간 경계에서 학급 수가 두 학급 범위 안에서 변동될 경우라도,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

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 수 변화가 즉각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해 행정 공백을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단설유치원의 행정 여건도 강화한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단설유치원 지방공무원 직급 상향과 특수여건 학교 기준 보안을 통해 학교 유형별 행정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현진 기자 ihj@